제주발전연구원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·연구교류 협약 체결 및 공동세미나

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과제

□ 배경 및 필요성

○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 및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중앙-지역 사회보장정책 연계협력 방안 도출과 함께

○ 제주지역 복지정책 진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□ 개최 개요

○ 주제 :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과제

○ 일시 및 장소

- 일시 : 2016년 3월 9일(수), 15:00 ~ 17:40

  · MOU 체결 : 15:00 ~ 15:20

  · 정책세미나 : 15:30 ~ 17:40

- 장소 :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

○ 주최 : 제주발전연구원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□ 프로그램

시 간		내 용	
MOU 체결	15:00~15:20	개회식	국민의례
		인사말씀	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원장
			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
		협약식	학술·연구교류 협약식
장내 정리	15:20~15:30	장내정리	장내정리
주제 발표	15:30~15:50	발표 1.	서울시·세종시 복지기준선이 제주도 복지기준선에 주는 함의(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)
	15:50~16:10	발표 2.	지역사회보장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도전 (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
	16:10~16:30	발표 3.	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 (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장내 정리	16:30~16:40	장내정리	장내정리
종합 토론	16:40~17:40	토론	좌 장 : 김태윤(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토론자 : (가나다순) 강창민(제주발전연구원 관광사회문화연구부장) 강혜규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장) 나용해(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) 심경수(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) 윤강재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) 현정화(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)
폐회	17:30	폐회	폐회

Content

서울시 · 세종시 복지기준선이 제주도 복지기준선에 주는 함의 …… 1
(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)

지역사회보장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도전 …… 27
(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)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 …… 37
(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
서울시 · 세종시 복지기준선이 제주도 복지기준선에 주는 함의

김 미 곤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

세종시·서울시 복지기준선이 제주도에 주는 함의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미 곤

2015. 3. 9.

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목차

- 1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- 2. 복지기준의 필요성
- 3. 복지기준 설정 원칙
- 4. 복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
- 5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
- 6. 함의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1. 외국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웹 부부(Sidney Webb & Beatrice Webb)의 국민복지 최저선(National Minimum)

- 오늘날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
  - 미쉬라(Michra, 1990)에 의하면, '복지국가는 국민복지 최저기준(National Minimum Standards)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' 한 것임
- 국민복지 최저선 개념은 웹 부부의 대표적인 저서인 「산업민주주의론」(Industrial Democracy, 1897)에서 처음 제시되었음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1. 외국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국민복지 최저선 개념의 계승과 발전

- 영국 구빈법(Poor Law) 논의에서 소수파는 1905년 '소수파 보고서'를 발간하는데, 주요 관점은 빈곤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임.
  - 이러한 인식은 1910년 웹 부부 주도의 "National Minimum" 확보운동으로 이어짐
- 이후 국민복지 최저선 개념은 복지국가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의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으며,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 ILO의 102호 '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' 등으로 계승, 발전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음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1. 외국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최저기준(minimum standards)에서 적정기준(decent standards)으로 이행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국 경제 호황은 복지기준을 최저기준에서 적정기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
  - 에스핑 앤더슨(Esping-Andersen, 1985)은 1950년대에 보편적이고 평등한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'적정한 급여 수준(adequate benefit standards), 평등, 예방적 사회정책, 수급자격의 강화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동했음을 지적
- 이러한 흐름은 ILO의 '사회보장 최저기준' 업그레이드에서도 나타남
  - 고용재해급여에 관한 조약(1964), 의료 및 상병급여에 관한 조약(1969), 장애·노령·유족급여에 관한 조약(1967)이 대표적임
  - 예컨대, 연금의 경우 1952년 최저기준의 급여수준은 40%였으나 1967년 조약에서는 60%로 상향 조정함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1. 외국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국민복지 최저기준(national minimum)에서 시민복지 최저기준(civil standards)으로 구체화

- 국가 차원의 국민복지 최저기준을 지방정부에 적용한 것은 1968년 동경도의 '시민복지 최저기준(Civil Minimum)'
- 동경도의 미노베 도지사가 시민복지 최저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이유는
  - 첫째, 국민복지 최저기준이 실제 일본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낮음
  - 둘째, 국민복지 최저선을 도시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2. 국내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복지기준의 토대: 대한민국 헌법

- 헌법 제34조에서 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”고 명시
- 동 조문은 국민복지 최저선(national minimum) 이상의 국민복지 적정선(decent standards)의 보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음

국민복지 최저선 확보운동

- ‘국민복지 최저기준’의 실현을 목적으로 참여연대는 1994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‘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’을 시작하고, 생활보호법 개정, 노인수당 수급 등 국민복지기본선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2. 국내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국민복지기본선 보고서 발간

- 1988년 김대중 정부 시절,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「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」 보고서(변재관 외, 1998)를 발간
  - 동 보고서에서 국민복지기본선을 ‘최저선(minimum standards)’과 ‘적정선(decent standards)’으로 구분
  -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을 부각
  - 소득·건강·주거·고용·복지서비스의 최저선 및 적정선을 제시
  - 동 보고서는 이후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

- 2000년 10월 ‘생활보호법’을 대체하는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을 시행함으로써 사회권으로서 국민복지 최저선(national minimum)을 담보하는 법적·제도적 토대를 마련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2. 국내의 복지기준 발전과정

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및 시행

- 지방정부에서 복지기준을 설정한 것은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임
  -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에서 '시민복지기본선'을 공약으로 제시
  - 공약에서 시민복지의 최저선 뿐만 아니라 '복지 적정선'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
  - 서울연구원 김경혜 외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2012년 「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」를 수행
-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1968년 동경도의 '시민 최저기준(Civil Minimum)'과 1998년 「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」 보고서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바 있음

세종시민 복지기준 설정 및 시행

-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2015년 현재 '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' 외에도 광주·부산·대구·대전광역시 등의 시민 복지기준 설정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Ⅰ. 복지기준의 발전과 개념
3. (세종시민) 복지기준 개념

복지기준 개념

- 복지기준은 역사적 산물로서,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라기보다 각국의 경제·사회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특서엥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
- 김미곤 외의 연구에서는 세종 복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
  - '세종시민 복지기준'은
    ① 공적 제도를 통해 세종시민에게
    ② 경제·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
    ③ 제공하는 제반 삶의 기준

Ⅱ. 복지기준의 필요성

복지권 보장

- 제주도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설정

제주도 특성 반영

-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 복지제도 설계

지역 형평성

- 읍·면·동 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

Ⅲ. 복지기준 설정 6대 원칙

- 사회권의 실현
- 보편주의 복지원리
-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준
- 시민참여 강화
- 지역적 형평성 고려
-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구분

Ⅳ. 복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
1. 복지기준선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의 조화

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(협의 및 조정)

-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
-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

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복지기준선 간의 위상

- 법리적으로 보면 복지기준선은 사회보장법제26조를 따라야 함
- 그러나 사회보장법제26조에 의거한 복지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경우,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사업 또는 복지기준 상의 새로운 과제는 거의 불가능
- 따라서 사회보장법제26조와 복지기준선 간의 조화 필요

Ⅳ. 복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
2. 복지기준과 지역복지계획 간의 조화

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지기준의 차이

구분	지역(복지)계획	(지역) 복지기준
법적 근거	-사회보장법제19조(사회보장에 대한 지역 계획의 수립·시행) -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제7조(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-없음
성격	-전 복지 영역에 대한 포괄적·종합적 접근 -현실적·점진적 접근 -법률적·행정적 성격 -5년 단위로 수립 -실행가능성 중심의 계획	-복지영역 중 규범적·권리적 영역을 다룸 -가치 기반의 철학적 접근 -정치적 성격 -비주기적(지자체장의 의지 및 임기) -이상을 다루는 등대 project(목적 지향성)
평가	-임의 규정(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제7조⑤항	-서울시의 경우 평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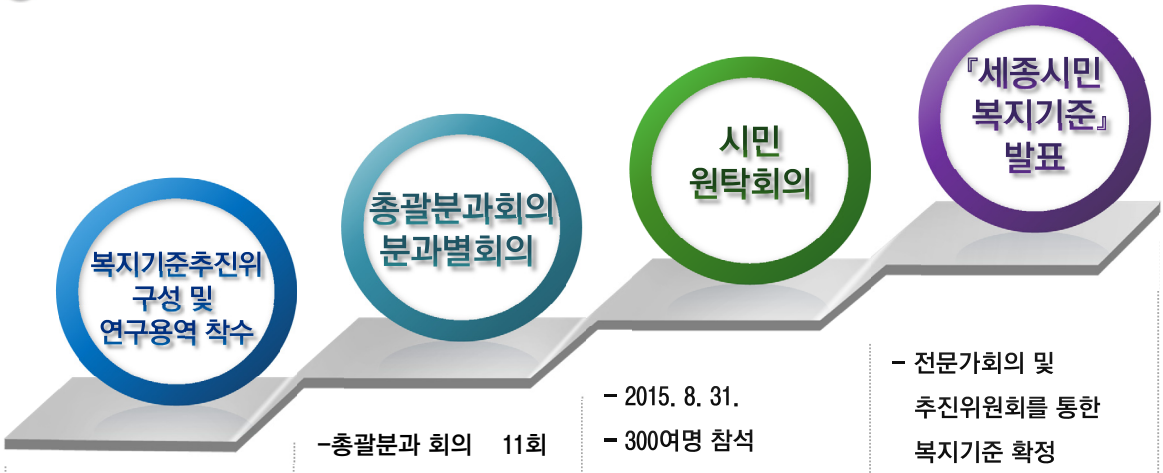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추진체계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추진경과



- 출범준비단 운영 : 2014. 11 ~ 2015. 1
- 복지기준추진위 발족 : 2015.2.6
- 연구용역 착수 : 2015.2.16

- 총괄분과 회의 11회
- 분과별 회의 32회
- 연구진 회의 13회

- 2015. 8. 31.
- 300여명 참석
- 시민의견 수렴
-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선정

- 전문가회의 및 추진위원회를 통한 복지기준 확정
- 2015. 12. 17. 발표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복지기준 영역

- 세종시민 복지기준 출범 준비단에서 6개 영역으로 결정



- (참고) 서울시 복지기준(5개 영역) : 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복지기준 비전 및 목표

비전	사람중심 행복도시 세종					
영역별 목표	복지서비스: 영유아·아동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안락한 생활을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종	소득: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종	일자리: 시민 모두가 능력과 의사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세종	주거: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에서 삶을 누리는 세종	건강: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세종	교육: 누구나 기본적 교육기회를 누리는 세종
접근 원칙	사회권 보장	보편주의	최저기준과 적정기준구분	수요자 중심	시민참여	지역적 형평성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영역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영역	추진과제	세부사업
1. 복지서비스	12	23
1-1. 영유아 아동	4	8
1-2. 노인	3	4
1-3. 장애인	3	8
1-4. 가족	2	3
2. 소득	4	7
3. 일자리	5	6
4. 주거	4	8
5. 건강	6	13
6. 교육	5	10
합계	36	67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1. 복지서비스

목표 및 기준

목표
- 영유아 아동에게 희망을,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, 장애인에게 차별이 없는 세종

적정기준
- 세종시민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% 이내의 지출로 향유할 수 있다.

최저기준
- 세종시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 법령에 규정된 복지 서비스를 10분 이내에서 보장 받는다.

	2016	2018	2020
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(%)	5.7	5.7	6.0
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(%)	20.0	25.0	30.0
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(명)	200	300	365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1. 복지서비스

[영유아·아동 분야]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아동양육 및 가족지원 인프라 확충	•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•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· 운영
2. 아동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	•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• 지역아동센터 전문프로그램 운영
3. 다양한 형태의 보육 제공을 통한 아동보육선택권 확대	• 시간연장형 보육기관 확대 • 장애아동 통합운영 어린이집 확대 • 휴일지정 보육기관 확대
4. 아동친화도시 구축	• 아동친화도시 인증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1. 복지서비스

[노인 분야]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5.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형평성 제고	•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확충
6.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	• 노인문화센터 설치 • 세종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
7. 노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	• 노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1. 복지서비스

[장애인 분야]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8. 균형적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	•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•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•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
9.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강화	•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•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강화
10.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	• 장애인복지관 재활 및 치료서비스 확충 •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· 운영 • 장애인 콜택시(세종 누리콜) 확대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1. 복지서비스

[가족 분야]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1. 일 · 가족 양립지원과 가족복지서비스 확대	•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 확충 및 운영
12.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 인프라 확충	•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•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확대 운영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2. 소득

목표 및 기준

목표
-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종

적정기준
- 세종시민은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수준(중위소득 50%)을 영위할 수 있다.

최저기준
-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(중위소득 40%)을 보장 받는다.

	2016	2018	2020
세종시 빈곤율(%)	4.94	4.09	3.72
최저소득 기준 보장률(%)	47.6	57.6	69.7
자활사업참여자 취창업률(%)	11.0	15.0	16.0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2. 소득

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 도입	•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 도입
2. 세종형 생활안정 보조제도 도입	• 세종형 생활안정 보조제도 도입
3. 세종형 자활일자리사업 확대	• 「장바구니 물류유통」 자활사업 • 「엄마손 간병」 자활사업 •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유치 •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취득 지원사업
4. 세종형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	• 세종형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3. 일자리

기준 및 목표

목표
- 시민 모두가 능력과 의사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세종

적정기준
- 세종시민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성을 향유할 수 있다.

최저기준
- 세종시민은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보장 받으며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.

	2016	2018	2020
세종시 고용률(%)	64	66	68
지급대상자 중 생활임금 지급 비율(%)	100	100	100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3. 일자리

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강화	•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 확대 • 일자리 취약계층 직업훈련 확대
2. 생활임금 도입	• 생활임금 도입
3.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	•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
4. 일자리지원 인프라 강화	• 일자리지원 인프라 강화
5. 고용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	• 고용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4. 주거

기준 및 목표

목표
-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에서 삶을 누리는 세종

적정기준
- 세종시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,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0%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.

최저기준
- 세종시민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 주거환경수준을 유지하며,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%를 넘지 않도록 정주권을 보장받는다.

	2016	2018	2020
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(%)	2.2	2.0	1.8
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(%)	4.5	6.0	8.0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4. 주거

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거주환경수준 확보	• 비수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• 긴급 임시거처 제공
2. 임대료 과부담 해소	• 생계급여가구 임대료 추가 지원 • 쉐어하우징(share housing) 지원
3. 양질의 저렴주택 재고 확충	• 행복주택 공급 추진 • 유휴시설 및 공 · 폐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보
4.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및 확대	• 주거복지 업무 일원화 및 지원제도 정비 • 주거복지 민 · 관 협업 체계 구축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5. 건강

기준 및 목표

목표	•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세종
적정기준	• 세종시민은 국내 최고의 건강수준을 누리고, 건강형평성을 향유하도록 한다.
최저기준	• 세종시민은 경제적, 지리적 문제로 필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.

	2016	2018	2020
건강서비스 수혜율(%)	30.0	40.0	50.0
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(%)	13.5	11.0	8.0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5. 건강

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시스템 구축	• 야간-휴일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• 공공 · 민간 협력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
2.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	• 보건소 신설 및 보건의료조직 강화 •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• 세종형 행복맘센터 설치
3.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강화	• 노년기 뇌건강증진사업 강화 •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
4. 세종형 건강관리체계 구축	•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• 세종형 건강마을 만들기
5.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사업 강화	•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•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
6.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	•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•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6. 교육

기준 및 목표

목표	• 누구나 기본적 교육기회를 누리는 세종
적정기준	• 세종시민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여건 및 복지지원을 향유할 수 있다.
최저기준	• 세종시민은 경제적 수준과 지역적 여건에 관계 없이 기본적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는다.

	2016	2018	2020
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율(%)	20.0	30.0	40.0
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(%)	2.3	1.5	1.1
성인의 비형식교육 평생학습 참여율(%)	35.0	37.0	39.0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6. 교육

추진과제 및 세부사업

1. 학생장애 조기진단 및 지원	• 학습장애 조기진단 및 지원
2. 중 · 고생 진로탐색 지원	•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•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
3.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	• 교육복지전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•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•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진로 지원
4. 시민의 역량 강화	• 세종시민대학 활성화 및 시민 학습동아리 확산 지원 •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· 운영
5.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	• 교육 · 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• 학교-지역-시 단위 교육복지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

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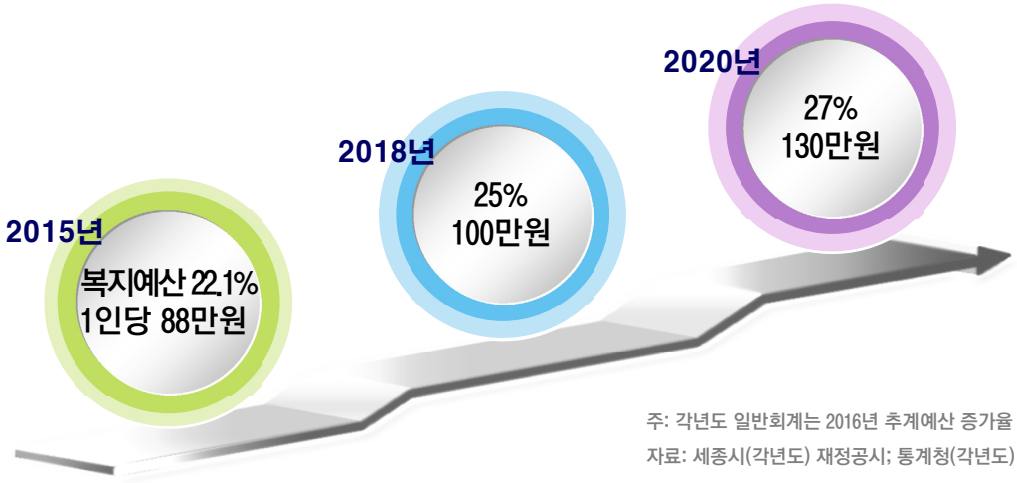
1. 세종형 방문복지체계 구축 : 행복드림센터 전면 확대	• 읍면동 복지업무 내용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조치원읍과 도담동 행복드림센터 설치 운영 중 • 지역특성에 맞는 행복드림센터 운영 확대 (2018년까지 총 4개소)
2.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	• 읍면동 협의체 역량 강화를 통해 관 중심에서 민간중심 운영으로 확대 • 읍면동별 교육 컨선팅 실시,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, 읍면동 복지기금 조성 등
3.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전면 개편 (중장기 과제)	• 중장기적으로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,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구축 • 전담공무원 및 방문간호 인력 2배 충원, 읍면동 직원의 지역 담당제 실제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등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

복지기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

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1%p 늘려 2015년 22.1%에서 2020년 27%로 확대
1인당 복지예산은 2018년 100만원, 2020년 130만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
"1인당 복지예산 전국 최고 수준" 달성



주: 각년도 일반회계는 2016년 추계예산 증가율 적용
자료: 세종시(각년도) 재정공시; 통계청(각년도) 인구추계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

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3단계 이행평가 실시

- 1단계: 복지기준 비전 달성을 위한 총괄지표에 의한 이행평가

투입지표	1.세종시민 1인당 복지지출 2.세종시 복지예산 비중
성과지표	1.세종시민 행복지수 2. 세종시민 영역별 만족도(복지서비스, 소득, 일자리, 주거, 건강, 교육)

- 2단계: 분과별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대표지표에 의한 이행평가

복지서비스	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 /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비율 /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지원 인원 수
소득	세종시 빈곤율 / 최저소득 기준 보장률 / 자활사업참여자 취창업률
일자리	세종시 고용률 / 지급대상자 중 생활임금 지급 비율
주거	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/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
건강	건강서비스 수혜율 /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
교육	중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율 / 고등학생 학업중단 비율 / 성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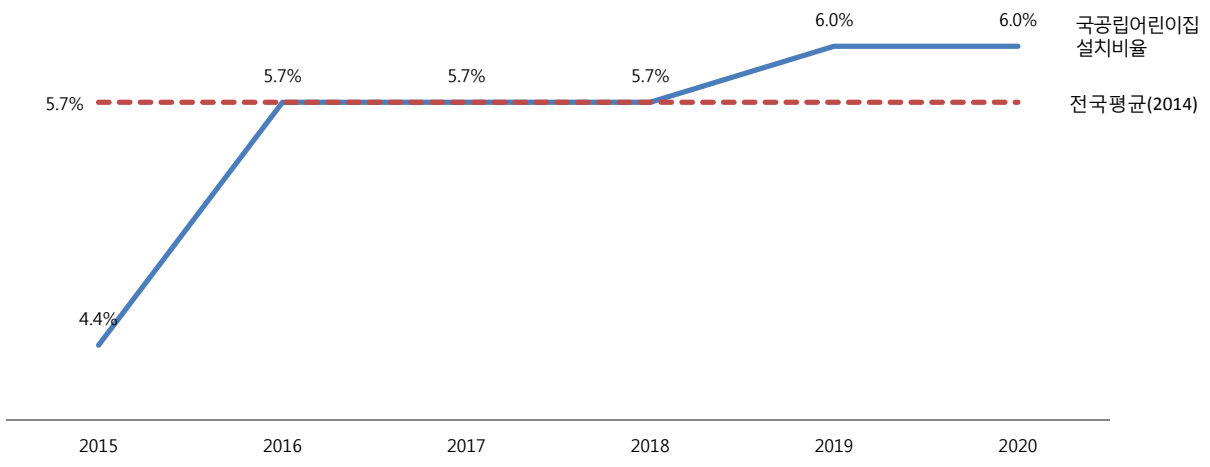
- 3단계: 복지기준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에 의한 이행평가

– (예시)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률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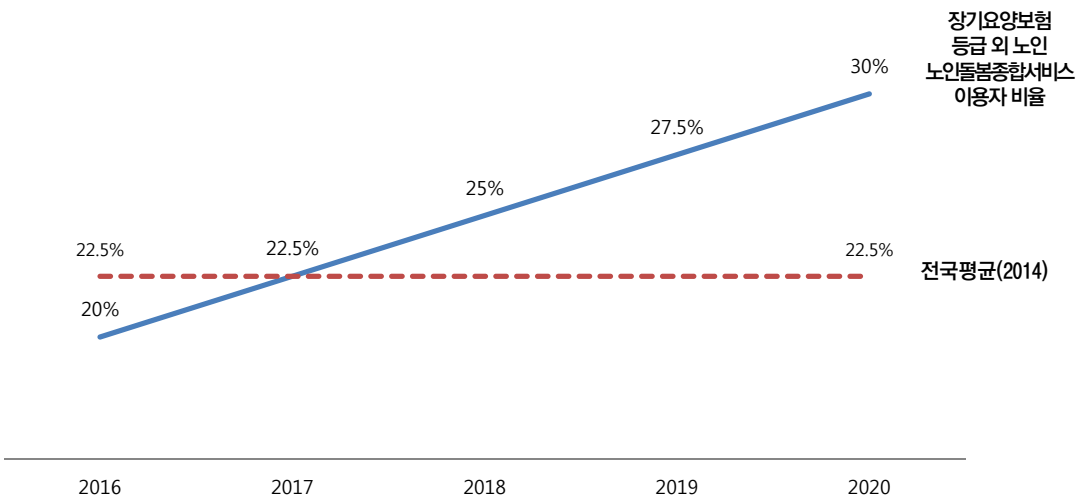
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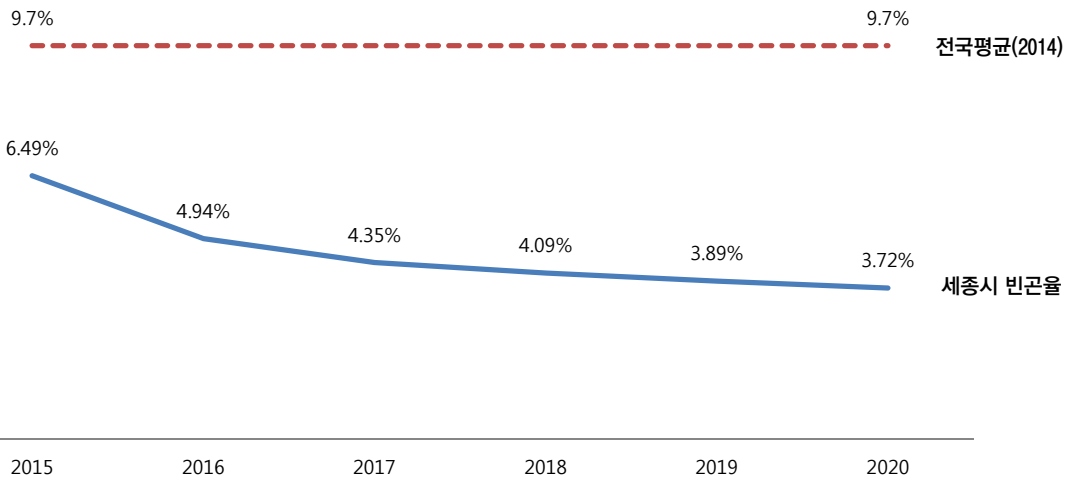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율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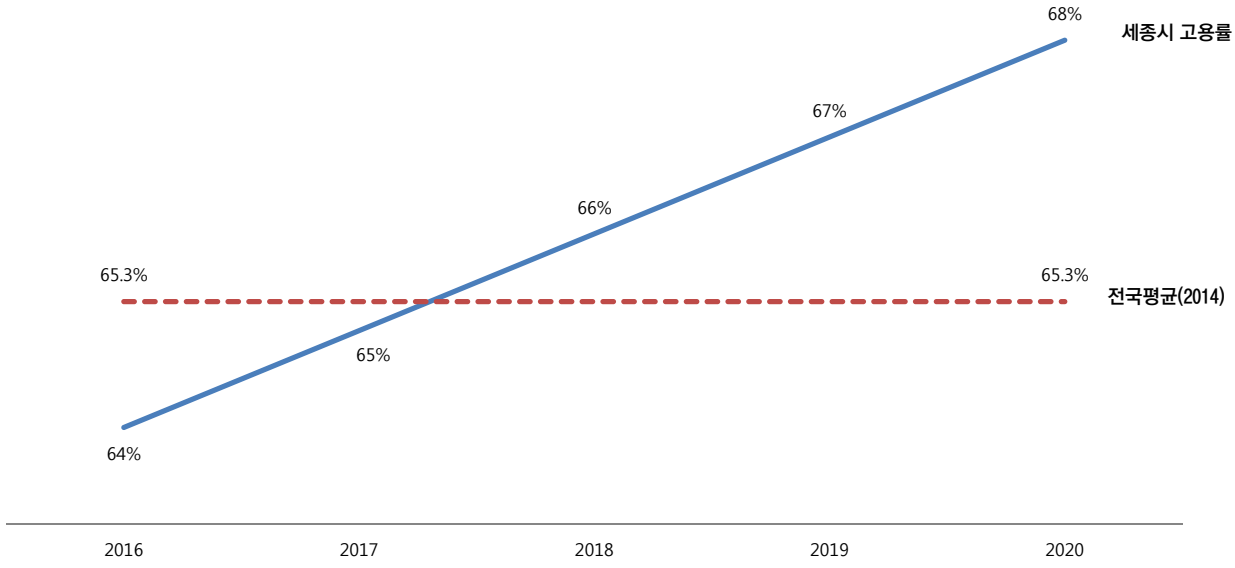
세종시 빈곤률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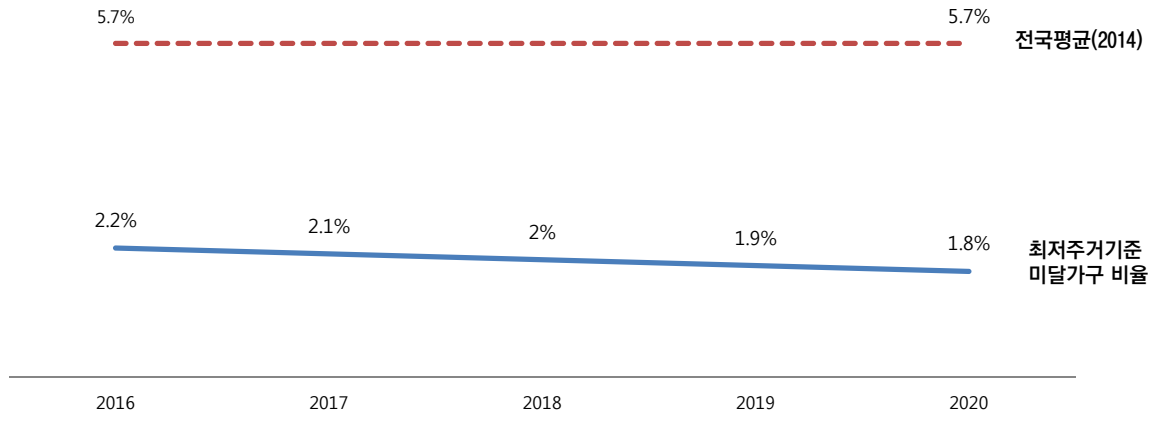
세종시 고용률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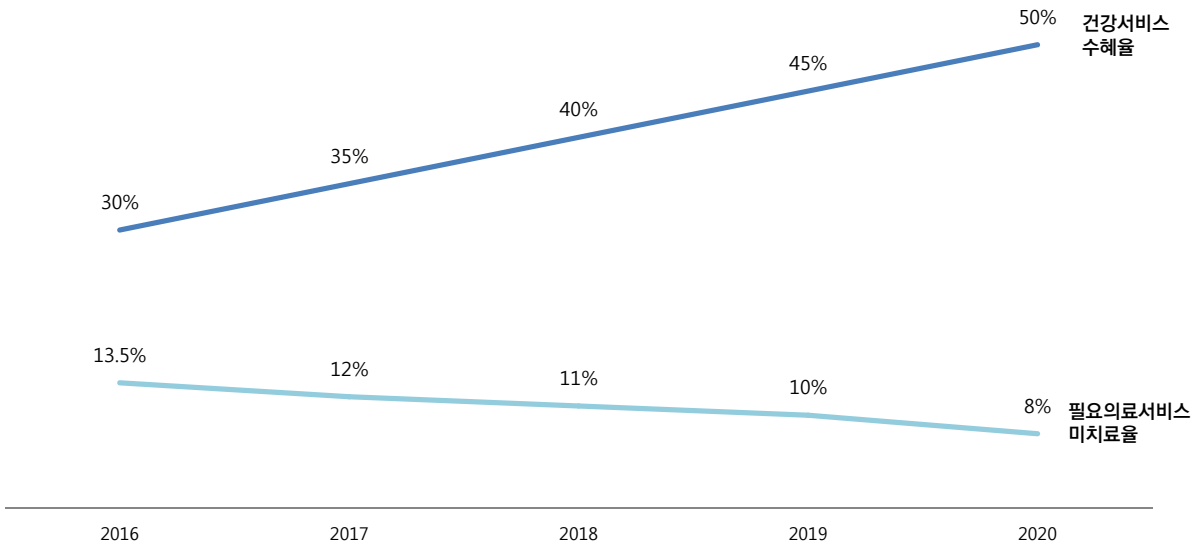
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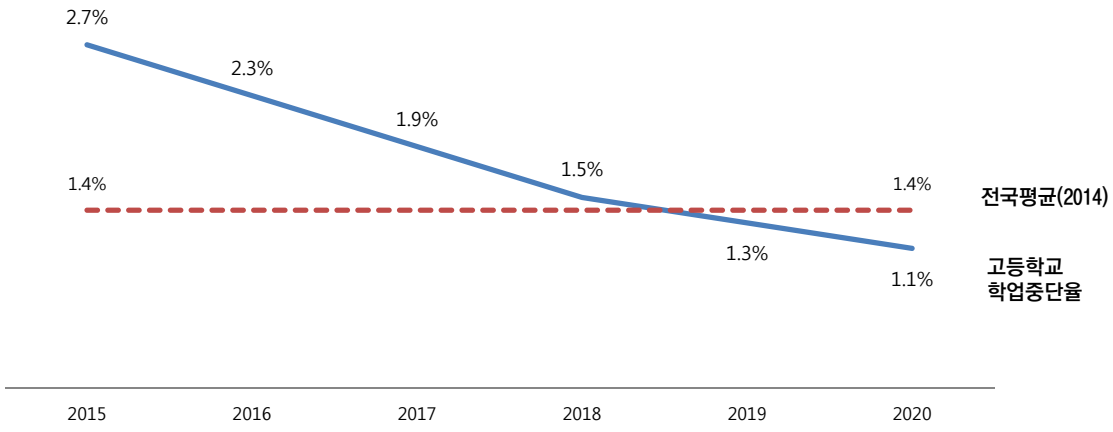
건강서비스 수혜율 및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



Ⅴ. 복지기준 사례: 세종시민 복지기준

세종시 5년 후 변화 모습

고등학교 학업 중단율



Ⅵ. 함의

시도 복지기준 설정 및 시행은 현행 복지의 공극을 줄이는 작업

- 중앙 차원의 복지정책 ⇒ 지역특성 반영 미흡 ⇒ 복지제도 공극 발생

시도 복지기준 설정은 시장·도지사가 시 ·도민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

- 복지기준 설정 ⇒ 삶의 질 제고 ⇒ 행복

시도 복지기준 설정 및 성공 여부는 시장·도시자 의지의 문제

- 복지기준 설정 ⇒ 추가 예산 소요

감사합니다

지역사회보장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도전

정 흥 원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

지역사회보장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도전과 과제

정홍원
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목차

- 지역사회보장의 최근 변화
  -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화
  -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
  - 사회보장 영역에서 중앙정부의 구심력 강화
  - 지방 사회보장예산 압박과 자체사업의 위축
- 제주도 사회보장의 흐름
  - 제주도 복지예산 비율의 연도별 현황
  - 제주도 복지예산의 지출 및 재원 구조
  - 신설 또는 변경된 사회보장사업의 현황
- 제주 지역사회보장의 과제
  -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균형
  - 통합적 관점의 사회보장체계
  - 사업 기획 역량의 강화와 결정권한의 확대

지역 사회보장의 최근 변화

국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변화

-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(2012.1 개정, 2013. 1 시행)
  - 사회보장의 개념(영역 확대), 평생사회안전망
  -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→ 사회보장기본계획/사회보장지역계획,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→ 사회보장위원회(역할 강화)
  -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, 제도의 운영원칙, 사회보장정보의 관리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전환(2014. 12)
 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→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(에너지바우처) ; 중위소득과 상대적 빈곤 개념
  -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4항)
-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확대(2014. 12)
  - 소득기준(최저생계비 120/150% → 기준중위소득 40/%) 및 금융재산 기준 상향
  - 위기상황별 지자체의 대응력과 재량권 확대(긴급복지지원법 제2조)
- 기초연금(장애인연금) 급여 인상 : 최대 20만원
- 의료보장제도(건강보험) 보장성 강화
-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 : 공무원 연금 개혁
- 사회복지 담당 인력 확충 :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
-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: 읍/면/동 복지허브화 추진

사회보장급여법 제정(2014. 12)
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-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과 절차(신청 → 조사 → 급여제공) 규정
- 지원대상자 발굴, 수급권자 지원, 사회보장급여 관리
- 사회보장정보
  - 사회보장정보의 처리, 사회보장정보의 보호
 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
- 사회보장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
  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내용, 시행 및 평가
  - 시도사회보장위원회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사회보장전담기구, 복지위원
  -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및 지원센터,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

사회보장 영역의 중앙정부 구심력 강화

-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(2013~)
  - 협의 의무 : 지방자치단체 자체(재원)사업도 예외 없음
  - 협의(=합의) 미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
  -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
-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(기존 시행 중인 사업) 정비
  -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+ 향후 지출증가 예상
  - 사회보장의 외형적 틀을 갖추어졌으나, 효율성 등 내실화는 미흡
    - (중앙정부) 분절적·산발적 사업 시행, 유사·중복, 국민의 낮은 체감도, 사업 집행/관리의 어려움
    - (지자체) 국가사업과 유사·중복, 소규모 사업 = 규모의 경제
    - 사회보장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혼재 ⇒ 사회보험은 중앙, 공공부조는 중앙과 지방(중앙＞지방), 사회서비스는 중앙과 지방(중앙＜지방)의 책임으로 재정리 필요

지방 사회보장예산 압박과 자체사업 위축

-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연도별 현황(일반+특별회계)

년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비율(%)	19.0	20.2	20.5	22.3	24.5	25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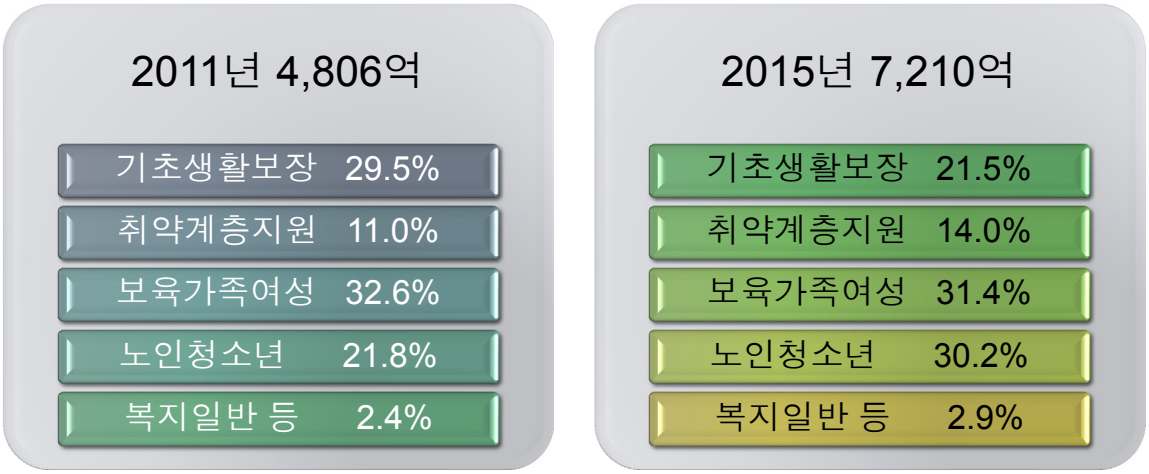
-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
  - 보조사업/정책사업 : 87.7%(2010년) → 90.9%(2015년)
  - 자체사업/정책사업 : 12.3%(2010년) → 9.1%(2015년)
  - (참고) 지자체 전체예산의 자체사업 비중 : 41.9%(2015년)
- 보조사업(매칭) 증가, 지자체 자체사업 위축 → 재정의존도 ↑

제주도 사회보장의 흐름

제주도 복지예산 비율(총계기준),(%)

년도		2011	2012	2013	2014	2015
일반회계 기준		12.7	12.5	14.7	16.3	20.3
	전국 평균	20.9	21.3	23.1	26.1	27.5
	도 평균	23.2	23.4	25.3	30.1	30.7
일반+특별회계 기준		16.8	17.6	19.2	21.0	18.9
	전국 평균	20.2	20.5	22.3	24.5	25.4
	도 평균	25.6	25.6	27.7	31.5	31.4

제주도 복지예산의 기능별 분류 현황



- 제주도 복지예산의 재원별 현황(2011~2015, %)
  - 국비 : 62.1 → 63.8 → 57.7 → 52.4 → 50.8
  - 도비 : 37.9 → 36.2 → 42.3 → 47.6 → 49.2

신설 또는 변경 사업, 유사중복 정비 사업

- 신설변경 사업
  - 2013년 ~ 2014년 : 신설·변경 협의안건 없음
  - 2015년
    -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(신설)
    - 장애인단체 종사자(근무자) 처우개선비 지원(신설)
   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여성폭력관련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(변경)
- 유사중복 정비 사업
  - 노인일자리지원사업 : 도사업 폐지, 중앙사업으로 통합
  -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: 9개 사업을 7개 사업으로 일부 조정
  - 여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 : 폐지, 동일한 중앙사업 있음
  -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트랙사업 : 폐지

제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목표

비전 :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

- 목표 1 :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
  -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
  - 다양한 가족지원
  -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구축
- 목표 2 : 고용과 복지 연계로 자립 환경 조성
  - 안정된 노후생활지원
  - 여성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
  -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
  -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
- 목표 3 : 건강하고 안심하는 제주사회
  -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노후건강과 생활안전 제고
  - 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체계 내실화
  - 공공의료서비스 확대
- 목표 4 : 도민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
  - 복지전달체계 개편
  - 공공과 민관협력 확대

제주 지역사회보장의 과제

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균형

-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데이터 구축
  - 복지수요, 복지공급의 개념과 측정 문제
  -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
-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격차
  - 정책투입(복지재원 등)의 근거, 우선순위 기준
- 복지재원의 유한성
  - 배분 적절성, 운영 효율성
  -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생산비용 고려
- 고려사항
  - 수요–공급의 (단순한) 수리적 매칭은 적절하지 않음
  - 영역별, 대상자별 복지시설 → 설치 통합적 복합적 기능 지향
  - 규모의 경제 : 대상집단 크기, 급여/서비스 총량 등을 고려
  - 복지기본선 설정을 전제로 하는 수요–공급의 균형 추구

통합적 관점의 사회보장체계

- 도 사업, 도–시 매칭 사업, 시 사업의 구분이 필요한가?
  -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업 → 도 사업 : 전환 검토
  - 매칭 사업 : 향후에도 유지할 것인가?
- 사회보장제도간 역할 분담, 상호 연계
  - 최저기준 – 적정기준의 다층적 구조 정착
- 급여/서비스의 유사·중복 ➔ 편중·누락이 더 중요
  - (소득)계층 간 비형평성/역전 현상
  - 대상별, 영역별 차별성 문제의 해소
-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
  - 복지, 보건, 교육, 노동 등의 영역을 관통하는 전달체계
  - 제주에 적합한 새로운 모형 구축을 모색

기획 역량 강화와 결정권한의 확대

-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이중적 시각
  - 사회보장사업의 집행(위임) 기관 vs. 자체사업 기획, 결정기관
  - 신설변경 협의 : 중앙정부의 통제/조정권 vs.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
  - 유사중복사업 정비 : 중앙과 지방의 상호조정 vs. 지자체 사업 축소
  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시행 : 자체사업 중심 vs. 중앙사업 중심
- 지자체의 권한

  = 자주재원의 규모

  =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분석, 기획, 설계 역량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

고 승 한 /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

제주특별자치도
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

2016. 3. 9

고승한 연구위원

JDI 제주발전연구원
Jeju Development Institute

목 차

Ⅰ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Ⅱ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Ⅲ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Ⅳ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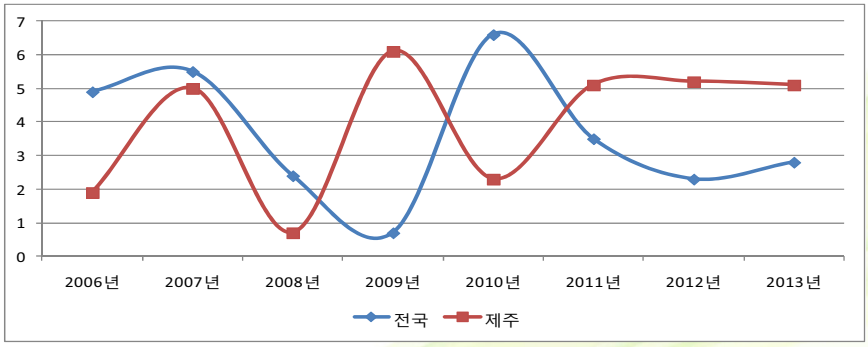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1. 경제 일반현황

GRDP(지역내총생산)의 변화

◈ 2009-2014년 연평균 성장률

제주 : 4.8%, 전국 : 3.1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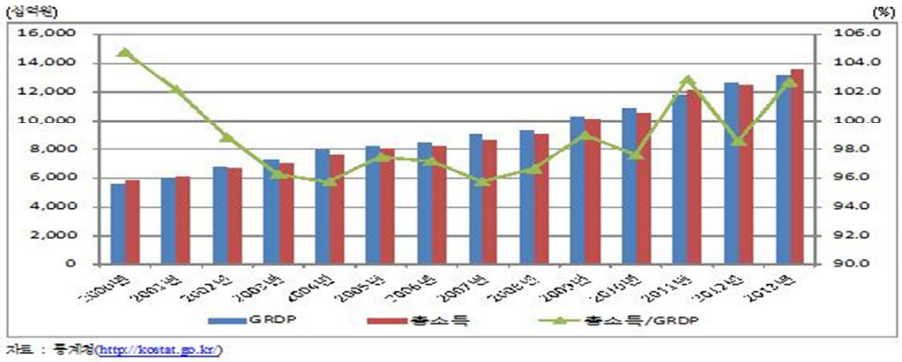
2005년 이후 GRDP 성장률 비교(전국 대 제주)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지역총소득과 개인소득

◈ 2013년 지역총소득 13.6조원 (전국 대비 0.9%)

◈ GRDP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 102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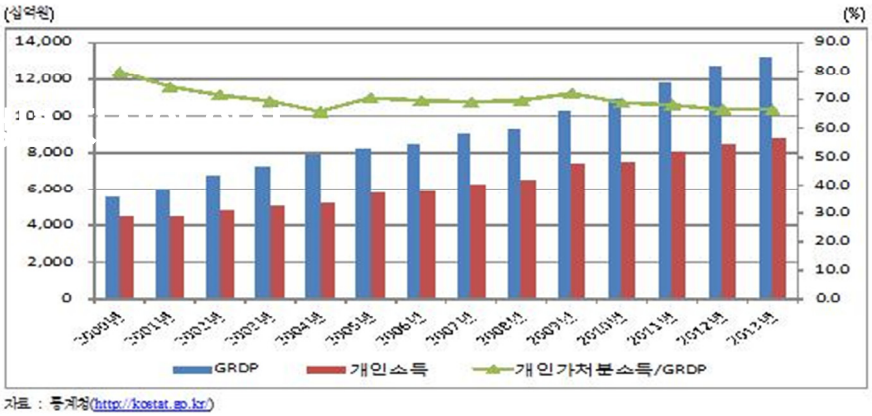
제주지역 GRDP 및 지역총소득 추이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지역총소득과 개인소득

◈ 2013년 개인가처분소득 8.8조원 (GRDP 대비 66.6%)

◈ 개인가처분소득의 GRDP 대비 비율 2000년에 80% 였으나 그 후 지속적 감소 추세



자료 : 통계청(http://kostat.go.kr)

제주지역 GRDP 및 개인가처분소득 추이

5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제주의 재정지표 (통계청, 국가통계포탈 Kosis)

◈ 지역내총생산(GRDP) 13,197,525백만원 : 전국 대비 0.9%

◈ 1인당 GRDP 23,172천원 : 전국 대비 81.4%

◈ 1인당 지역 총소득 23,801천원 : 전국 대비 83.0%

◈ 1인당 개인소득 15,442천원 : 전국 대비 97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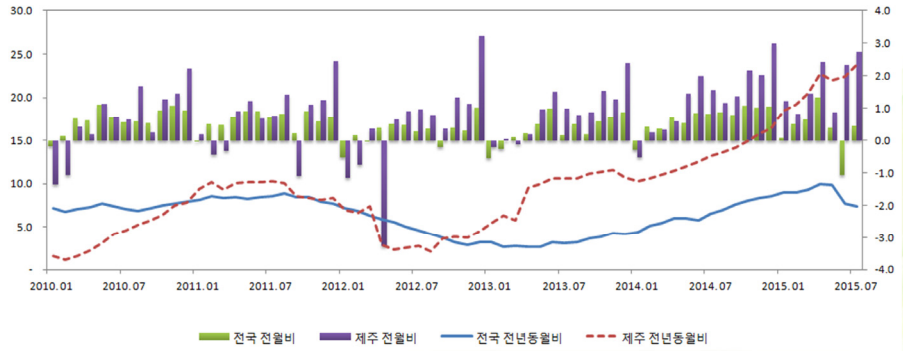
6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가계대출

◈ 전국 : 전월비 0.4%, 전년동월비 7.4%

◈ 제주 : 전월비 2.7%. 전년동월비 23.9%



제주지역 가계대출 추이

7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제주의 산업구조

(단위 : %, %p)

구분	2005년	2013년	변화 (13~05)	연평균 성장률
총 부가가치(기초가격)	100.0	100.0	-	6.3
농림어업	**18.1**	**14.9**	**-3.2**	**7.0**
광업	**0.3**	**0.2**	**-0.1**	**4.6**
제조업	**3.2**	**2.6**	**-0.6**	**3.2**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2.3	2.2	-0.1	6.4
건설업	8.4	8.6	0.2	4.7
도매 및 소매업	7.8	8.8	1.0	7.4
운수업	4.8	4.7	-0.1	4.5
숙박 및 음식점업	5.6	6.4	0.8	7.2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2.7	2.2	-0.5	3.2
금융 및 보험업	6.2	4.8	-1.4	2.9
부동산업 및 임대업	9.3	8.4	-0.9	4.5
사업서비스업	2.3	4.3	2.0	14.4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	12.1	12.8	0.7	7.3
교육서비스업	7.4	7.3	-0.1	5.8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4.5	5.4	0.9	9.4
문화 및 기타서비스업	5.0	6.2	1.2	7.5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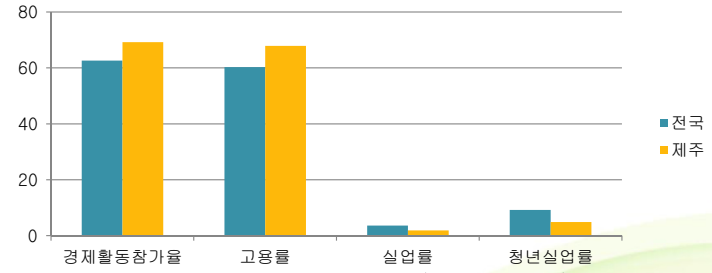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제주의 고용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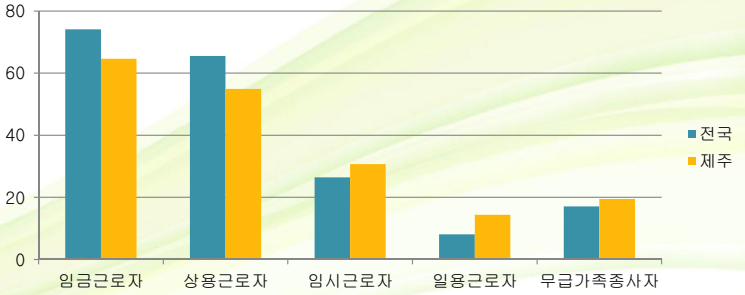
◈ 경제활동참가율 69.2%,
고용율 67.9%, 실업률 1.9%, 청년실업율 4.9%

◈ 타시도 비교 아주 양호
◈ 임금근로자 64.6% (전국 74.1%), 상용근로자 54.9% (전국 65.5%), 임시근로자 30.7% (전국 26.4%), 일용근로자 14.4%(전국 8.1%), 무급가족종사자 19.5%(전국 17.1%)

◈ 타시도 비교 열악



제주지역의 고용지표 현황 (2015년도 기준)



제주지역의 종사자 지위별 고용지표 현황(2015년도 기준)

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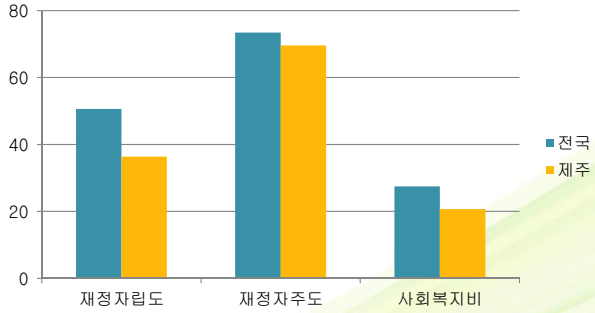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제주의 재정구조

◈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비

제주 : 36.4%, 69.6%, 20.7%

전국 : 50.6%, 73.4%, 27.5%



제주지역의 재정지표 현황 (2014년도 기준)

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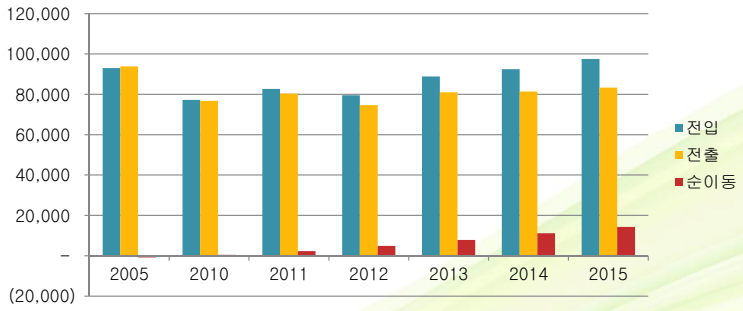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2. 사회 일반현황

제주지역의 순인구 증가

◈ 2005년 순인구 마이너스 증가 (805명 감소)

◈ 2010년 순인구 437명 → 2015년 순인구 14,257명 급증



제주지역 전입·전출 인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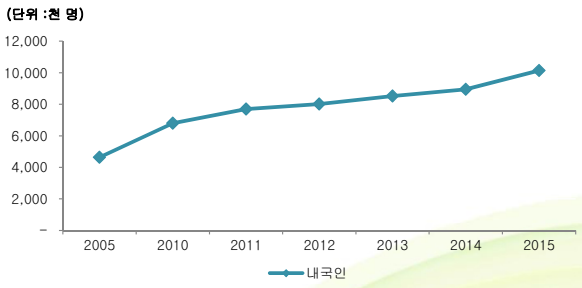
11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1000만 관광객 시대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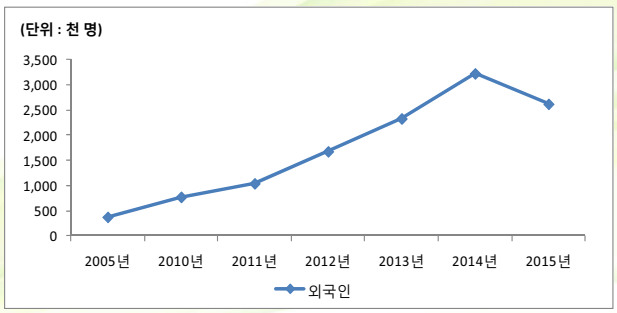
◈ 내국인 관광객

2005년 474만여명
→ 2015년 1,014만여명
2배 이상 증가



◈ 외국인 관광객

2005년 38만여명
→ 2015년 244만여명
6배 이상 증가



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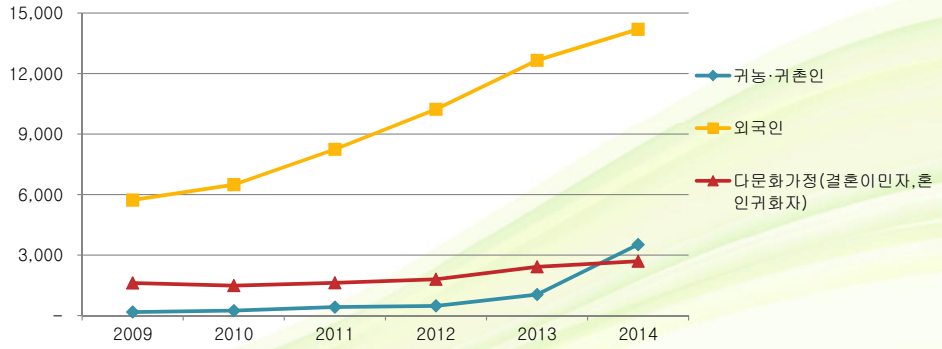
Ⅰ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이주민의 지속적 증가

◈ 귀농귀촌인 2009년 177명 → 2014년 3,522명

◈ 외국인 2009년 5, 729명 → 2014년 14,204명

◈ 다문화가정 2009년 1,614명 → 2014년 2,696명



제주지역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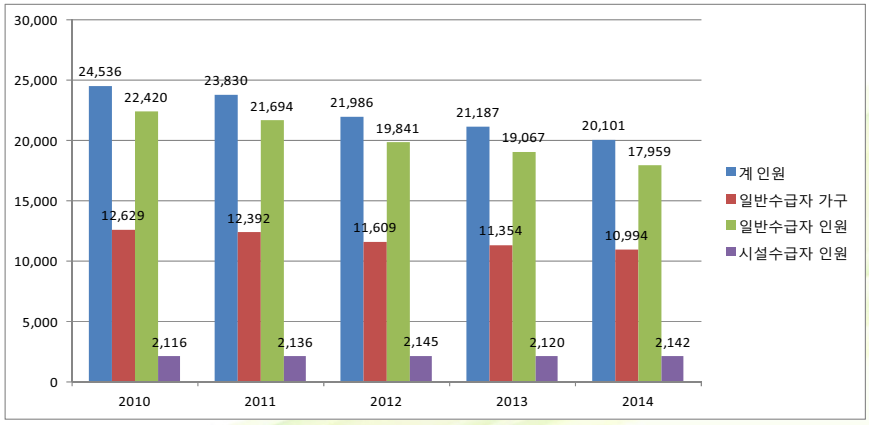
13

Ⅰ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빈곤층의 감소 추세

◈ 기초생활수급자 2010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

◈ 서귀포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대적 증가 추세



기초생활수급자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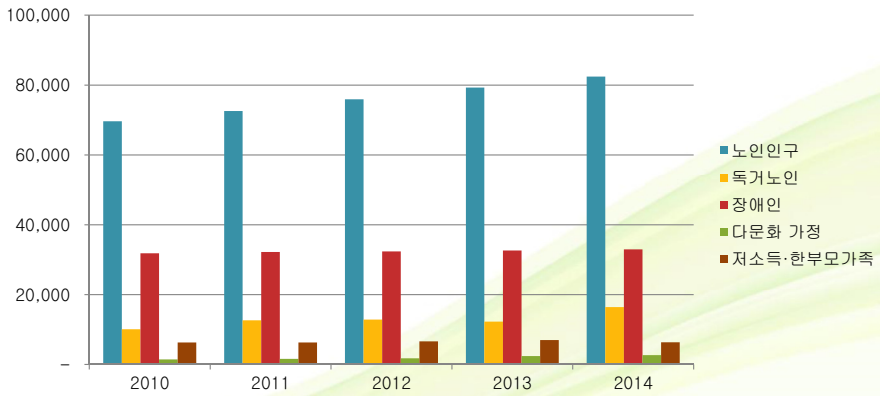
14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 추세 (2010-2014년)

◈ 노인인구 18.3% 증가, 독거인구 63.2% 증가, 장애인 3.5% 증가

◈ 다문화가정 81.5% 증가, 저소득· 한부모 가족 0.9% 증가



제주지역의 취약계층 증가 추세

15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지역사회건강의 악화 잠재

◈ 흡연율, 음주율, 치매유병율 등 타시도 대비 상위권 차지 (2015 지역사회건강조사, 질병관리본부)

◈ 청소년의 흡연•비만 등으로 건강 적신호 (2015 청소년건강행태조사, 교육부•질병관리본부)

- 도내 중•고등학생 흡연율 8.6% (전국 평균 7.8%, 전국 17개 시•도 중 5위)
- 매일 흡연 학생 비율 4.7% (전국 평균 3.8%, 전국 17개 시•도 중 3위)
- 음주율 12.7% (전국 평균 16.7%)
- 비만율 12.9% (전국 평균 10.9%, 전국 17개 시•도 중 1위)
- 과체중률 6.9%, 전국 17개 시•도 중 1위)
- 정상체중률 76.0%, 전국 17개 시•도 중 17위)

16
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지역사회건강의 악화 잠재

◈ 통계로 본 제주지역 아동의 질병 심각

제주지역의 아동 질병 현황 (전국 1위)

(단위 : %, 명)

구분	제주	전국 평균	통계 출처
초등생 비만율	20.5%	14.2%	제주특별자치도육청(2014) 비만관리 지침
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병율	7.9%	5.8%	국립환경과학원(2012) 어린이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
아토피 피부염	337/만명	243.5/만명	국민건강보험공단(2010), 2009년 주요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
알레르기 비염	1,312/만명	1,163/마명	
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	중학생 비율 20.8%(관심군) 11.0%(주의군)		교육부(2013. 9) 학생 정서 행동특성검사 결과

자료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(2015. 9). 「학생건강증진과 비만 중이기 정책토론회 자료」 4쪽 재인용

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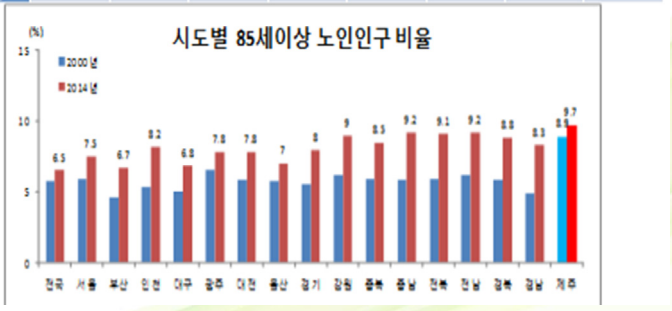
I.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

고령사회의 도래

◈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대비 중위권

◈ 85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 대비 최상위 (지난 50여년 동안 1위)
※ 장수지역

구 분	총인구		65세 이상 인구		80세 이상 인구		85세 이상 인구	
	2000년	2014년	2000년	2014년	2000년	2014년	2000년	2014년
전 국	47,732,668	51,327,916	7.03%	12.70%	16.12%	19.86%	5.67%	8.10%
제 주	542,368	607,346	7.99%	13.67%	19.18%	23.13%	8.88%	9.65%



노인인구 현황 비교

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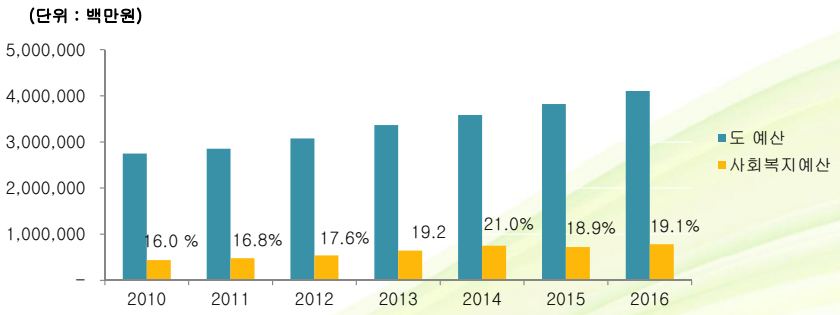
II.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1. 사회복지 재정 (2010 - 2016년)

사회복지예산 비중

◈ 도 전체 예산 49.2% 증가, 사회복지 예산 77.8% 증가

◈ 사회복지 예산 비중 19.4%p 증가

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변화 추이

II.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2. 민간자원 현황

사회복지시설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현황(2014. 12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구분	형태	시설수(1,460개소)
노인	생활 (주거, 의료)	64
	이용(재가, 여가, 일자리 등	491
영유아.아동	생활 (양육, 생활	11
	이용(어린이집, 아동센터 등)	680
장애인	생활 (생활시설)	30
	이용(재활시설, 판매시설)	38
여성	생활 (보호시설)	5
	이용(상담소, 긴급전화 등)	10
한부모	생활(가족복지, 보호시설)	4
청소년	생활(쉼터)	5
	이용(상담, 공부방 등)	83
정신질환자	생활(요양 등)	1
	이용(복귀)	4
노숙인 등	생활(재활)	2
	이용(지원)	1
지역주민	종합사회복지관 등	31

자료 : 제주특별자치도, 「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, 2015-2018」 52쪽 재정리

II.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사회복지 관련 단체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황(2014년 기준)

(단위 : 개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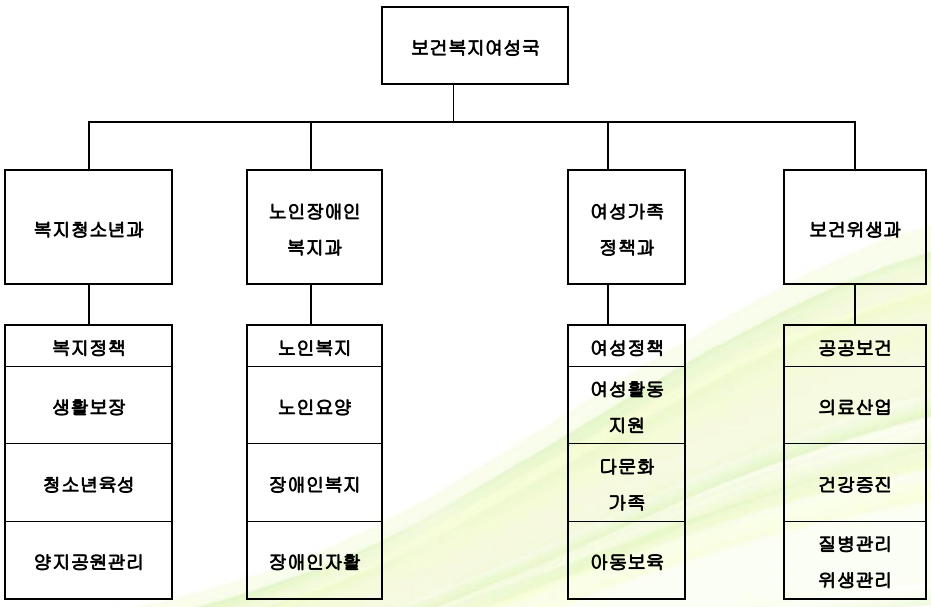
구분	단체 분야	지역	단체수
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단체 (총 108개)	사회복지분야	제주시	4
	청소년분야	제주시	21
		서귀포시	3
	노인복지분야	제주시	3
	장애인복지분야	제주시	13
	여성분야	제주시	26
		서귀포시	5
	보건단체분야	제주시	17
	위생단체분야	제주시	16

자료 : 제주특별자치도, 「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, 2015-2018」 53쪽 재정리

21

II.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사회복지 행정 조직 (제주특별자치도)



22

II.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과 현안 이슈

사회복지 거버넌스

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

-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」 에 의한 구성

- 행정, 학계,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12명

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(제주시, 서귀포시)

- 행정시 단위의 민간협력 조직

◈ 제주복지공동체포럼 (제주특별자치도의회)

- 연구회 (의원모임)

23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1.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(2012~2021년)

2021년 비전	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	
목표	자원봉사참여율	10%(2010)→20%(2015)→30%(2021) 확대
	장애인편익시설 설치율	75.1%(2008)→90%(2015)→95%(2021) 단계적 확보
	합계출산율	1.38명(2009)→1.7명(2015)→2.0명(2021) 단계적 제고
	노인일자리 창출	2,013개(2010)→3,000개(2015)→5,000개(2021) 단계적 창출

24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1.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(2012~2021년)

전략

◈ 글로벌 통합형 복지 실현

-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기능화 정책 추진
- '수눌음 정신' 계승 민간협력 시스템 구축
- 글로벌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운영
-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•비장애인 통합 사회공동체 구축

◈ 제주 미래세대 비전 제시형 복지

- 국제자유도시와 여성친화 프로젝트
- 국제자유도시의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희망프로젝트
- 영유아 무한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
-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마련

25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1.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(2012~2021년)

◈ 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복지

- 노인 소득안정,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
- 사회적 부양 시스템 구축
- 제주지역형 에델개혁모델 개발 및 적용가능성 모색
-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골드 지역공동체 조성

26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2. 민선 6기 사회복지 공약사항

◈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구현

◈ 제주유니버설디자인(무장애도시) 추진

◈ 일•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 확대

◈ 양육과 재활, 교육,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시스템 구축

◈ 광역치매센터 설립,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

◈ 조손가정, 이혼가정,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시행

◈ 다문화가정 및 정착주민 지원 사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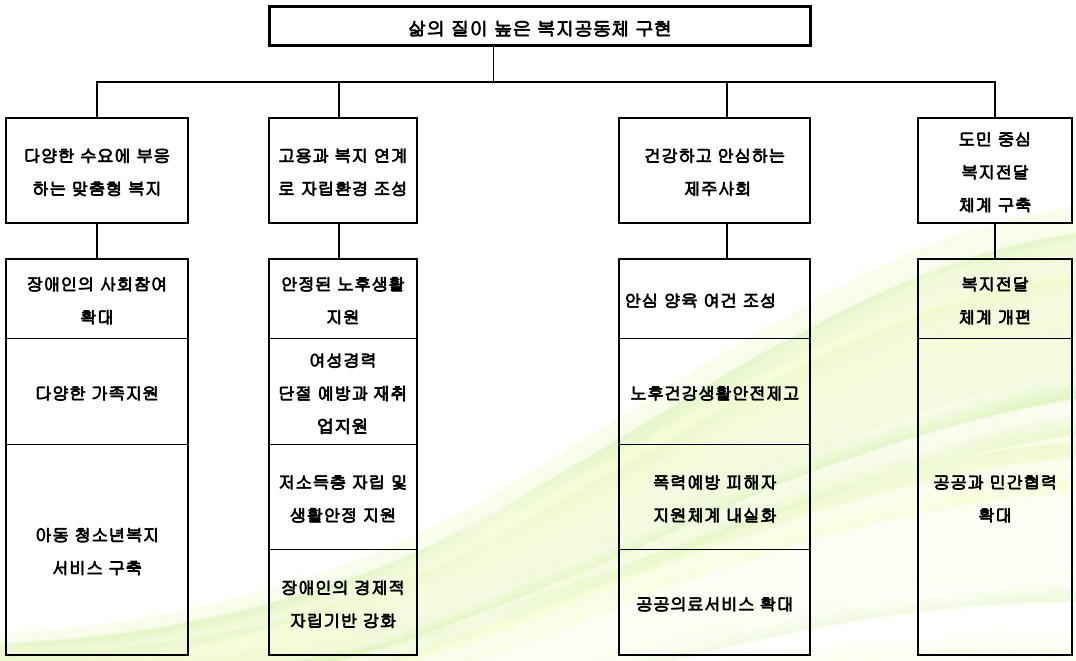
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

◈ 먹거리 교육과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

27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3.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(2015~2018년)

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4.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 추진 업무내용

비 전	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
목 표	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

실천전략	실 행 계 획
효율적인 복지정책 으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 사회 조성	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민.관 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촉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
어르신 및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따듯한 사회 조성	고령사회, 100세 시대를 위한 고령친화 기반 조성 노인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	일.가족 양립지원 등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여성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양성평등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
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	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도민 건강수준 향상 제주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신종 감염병 등 관리체계 강화 국제적 수준의 위생서비스 추진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5. 문제점

◈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 미흡
← 정책 모니터링 부재

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업에 의존
← 예산지원 (복지재정)

◈ 사회복지정책의 단기사업 위주
← 현안 문제 해결 중심

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미흡
←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미흡
(대상자 발굴, 통합사례 관리, 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등)

30

III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

5. 문제점

◈ 복지와 고용 연계 체계 구축 미흡
← 고용복지센터 미설립

◈ 민간협력 사회복지 강화 미흡
← 사회복지 아젠다의 정례적 공론의 장 마련 미흡

◈ 사회복지 수요 급증과 해소 불일치
← 예산과 인력 부족

31

IV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과제

1.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

◈ **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정의 확대 → 25% 수준**

-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높은 복지지출 (사회투자형 접근)

- 중앙정부의 의존성 탈피

◈ **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 접근에 대한 생산적 협의**

※ 국가 사회보장제도 문제 ↔ 지자체 고유업무 → 정부 대 지자체 정책갈등
(예, 청년수당, 청년배당)

◈ **소득보장형 복지시책 강화**

- (가칭) 제주도민복지기준선 설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
※ 제주형 기초보장제도 수립 (예, 서울특별시 '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참고)

◈ **생활임금제도 도입 (예, 광주광역시, 경기도 성남시 시행 참고)**

32

IV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과제

2. 사회복지 계획 · 집행 · 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융합화

◈ **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계획들 간의 연계성 강화**

※ 사회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

◈ **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 확보**

※ 예산 및 프로그램의 획기적 변화

◈ **고용-복지 업무 연계 및 통합화**

※ (가칭)제주고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(예, 남양주시 시행 참고)

※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마을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 및 통합
→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

33

IV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 과제

3.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

◈ **사회복지 대상자 및 지역별 복지체감도 제고**

※ 기초생활수급자, 결혼이민자•혼인귀화자, 이주민,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, 노인, 장애인 등

※ 서귀포시의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 (기초생활수급자, 이주민, 노인 등)

◈ **사회복지시설의 재편화(다기능, 특성화)** → 권역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(제주시권, 서귀포시권, 제주동부권, 제주서부권)
(제주시 동지역의 구제주권에 9개 종합사회복지관 밀집, 제주시 신제주권 → 노인복지관 1개 유일)

※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배분과 확대 필요

◈ **(가칭) 제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→ 중장기 사업으로 적극 검토 필요**

34

Ⅳ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과제

4.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

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

※ 보건, 복지, 교육, 문화, 고용, 주거 등 참여범위 확대

◈ 도내 사회복지 관련 민관 기구(조직) 간의 연계 강화

※ (가칭)제주사회복지공동체포럼 설치 및 운영 (지속성, 구심점 역할 필요)

※ 사회복지위원회(도청), 제주복지공동체포럼(도의회), 사회보장협 의체(행정시),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,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의회, 제주고용포럼(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), 교육복지(도교육청), 문화복지(도문화예술재단), 의료복지, 주거복지 등 간의 연계 및 네트워킹 구심체 필요

Ⅳ.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의 향후과제

5. 미래세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 강화

◈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

※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(국공립 어린이집)

※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(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) 유도

◈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건강증진

※ 아동•청소년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

◈ 청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

※ 청년복지 종합대책 수립

"역사는 현실주의자의 성공보다
이상주의자의 좌절을 통해 더 발전한다."

감사합니다



memo

memo

memo

memo